

“전북특별법 통과 위해 마지막까지”

김관영 도지사, 간부회의서 강조... 내년 전북도 본예산 삭감 최소화 노력도 당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특별법’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다시한번 전북의 기세를 올릴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일 개최된 도청 간부회의에서 “국가예산과 더불어 전북특별법 등 현안법안에 대해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거둬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다시한번 전북의 기세를 올릴 수



있도록 다음 주 예정된 법사위, 본회의 통과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전북특별법 못지않게 새만금사업법도 중요하며, 법 통과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후속

조치 사항도 정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주 처리가 예상되는 국가예산안에 대해서도 최종 마무리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기재부 1차 심사 동향을 파악하여 시군 및 지역의원실과 공조를 통해 마지막까지 총력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2023년 도 본예산안이 도의회 예결위 심사가 진행중이다”며 “그동안 상임위 계수조정된 부분과 함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삭

감 최소화를 위해 소관 실국장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김 지사는 “지난달 10일 대통령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스마트농업발전으로 농협혁신’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법안 제정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전북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및 청년농업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정목표인 농생명산업 수도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스마트농업 육성 활성화 및 선도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경수 기자

도내 6·1 지선, 불법·부정 혼탁

전주지검, 도내 선거사범 311명 중 152명 기소

지난 6·1 제8회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1일 종료됐다. 전북지역의 이번 지선은 혼탁 그 자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 지역에서 이번 지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입건된 인원은 총 311명에 달한다. 이 중 검찰은 152명(구속 4명)을 법정에 세웠다.

지청별 현황을 보면 전주지검은 입건자 122명 중 44명을 기소했으며, 군산지청은 61명 중 19명을, 정읍지청은 47명 중 23명, 남원지청은 81명 중 66명의 선거사범을 재판에 넘겼다.

총 입건자 311명 중 흑색선언이 87명으로 27.9%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금권선거가 59명으로 18.9%, 폭력선거 13명으로 4.1%, 기타 152명으로 48.8%에 달했다. 선거유형별로 보면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208명의 입건자 중 98명이 기소돼 가장 혼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뒤이어 광역단체장인 전북도지사 선거가 40명 중 16명,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시·군의원 등 기초의회 선거가 31명 중 15명이 기소됐다. 전법교육감 선거는 20명의 입건자 중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선거사범 수사결과 다른 시도에 비해 전북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범죄가 많았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 조동수사 때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여야, 예산부수법안 검토 이번주 쟁점사안 추가 논의

8-9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여야는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과 연동되는 예산부수법안 전체 검토를 마쳤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 항목 심사는 이번주에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조세소위원회 열고 예산부수법안을 심사했다.

조세소위는 앞서 전날까지 안건 315건이 포함된 8권의 자료 중 7권의 검토를 마쳤다.

아날은 남은 1권의 검토를 마친 뒤 쟁점 사안에 대한 추가 심사를 이어갔다.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한 후 오후 3시40여분까지 8권 자료를 모두 훑었다.

여야는 오는 5일 오전 10시에 경제재정소위원회, 6일 오전 10시에 조세소위 회의를 잇따라 열고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6일 오후 2시에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앞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여야가 그 이전까지 예산안과 연동되는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뉴스1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철강산업 현장 방문.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 2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철강산업 현장점검을 위해 전북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방문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 “익산·전북 기만 행위”

민주 김수홍 의원, “정당한 공모 절차·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은 익산과 전북을 기만하는 행위”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일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이 증액 반영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고 익산에 유치된 국립 호남권 청소년상담센터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렸다.

국립 호남권청소년상담센터는 정서 행동 영역에서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시설로 2026년 개원을 목표로 공모된 사업이며, 지난 8월 익산시는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광주시와 치열한 경쟁 끝에 유치했다.



하지만 국회 여가위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설립에 10억 증액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며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익산과 광주가 유치 경쟁을 벌였기에 호남 내 지역갈등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동일한 세부사업(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내 유사한 내역으로 증액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전북지역 청소년단체 등 전북의 우려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수 기자

김 의원은 “이런 식으로 절차와 결과를 무시하고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어떤 지자체가 국가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는가”라며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수용한 여성가족부는 물론 지역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일부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수홍 의원은 “정당한 공모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립 호남권 청소년상담센터를 유치한 익산시와 전북도는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고 익산의 국립 호남권청소년상담센터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정읍시의회, 3차 본회의서 행감 결과보고서 채택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12월 2일 제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한선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시 영유아 발달장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고 역설했다.

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고,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안건 심의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길)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으로 박일 의원과 이도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항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으로 이만재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례안 이상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항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가결했다.

향후 일정은 오는 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으며, 12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예산안을 승인하고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도,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감찰 돌입

12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시군과 합동감찰반 운영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공직기강 강화를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지난달 25일 김관영 도지사가 간부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최근 송년회 등 연말연시 잦은 모임으로 인해 자칫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감찰사항은 △음주운전, 성비위 및 갑질 등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 품위훼손 행위 △금품수수 등 공무원 행동규범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소극행정 업무처리 등 민원 혼선 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

기강이 행위 등이다.

특별감찰 기간 중 적발된 공직자는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김진철 도감시관은 “이번 특별감찰은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적발된 공직자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징계를 확정하겠다”면서 공직자들의 주의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소각장 시설 벤치마킹

경기 하남 유니온파크 방문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남숙 의원)가 지난 1일 경기 하남의 자원순환시설인 하남유니온파크를 찾아 소각장 조성 및 운영 방식 등을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환경위원회의 이번 방문은 전주 권소각자원센터의 내구연한이 2026년 9월 만료됨에 따라 이후의 시설 설비와 운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소각처리시설과 시민 휴식 공간 등 유니온파크 운영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전주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사업비 3,030억원을 들여 지난 2015년 6월 건립한 하남유니온파크는 지하에 소각처리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등 자원순환시설을 갖추고, 지상에는 유니온타워와 잔디광장, 어린이 물놀이시설 등 편의시설을 만들어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남숙 복지환경위원장은 “우수 사례를 직접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연구하는 복지환경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도의회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 질의 이어가

에디슨모터스에 지급보증, 군산형일자리 관리 부실 등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지난 2일 2023년 전라북도 예산안과 각종기금 운영계획안 및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은 군산형일자리사업의 참여기업인 에디슨모터스가 지난 1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는 점, 전북신용보증재단이 21.6억 100여원을 지급보증한 것과 관련하여, 전북도의 대책을 물으며, “채권확보 등 신속한 조치와 회수 대비로 전북도가 피해입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수 기자



이수진 도의원, 한정수 도의원, 김성수 도의원

특히,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해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선정지원사업에 (주)푸르밀이 선정되었던 것을 보고 푸르밀은, 실제 10월 사업종료 결정 시 노사총과 합의가 부재한 기업이었다는 사례를 들어, “변별력없는 무의미한 사업”이라고 질타했다.

또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기업유치지원단 소관 사업을 살

포며 “도지사의 대기업 유치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와 관련 투자 설명회·홍보 등의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함”을 짚으며 사업별 계획 및 예산규모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은 군산형일자리사업의 참여기업인 에디슨모터스가 지난 1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는 점, 전북신용보증재단이 21.6억 100여원을 지급보증한 것과 관련하여, 전북도의 대책을 물으며, “채권확보 등 신속한 조치와 회수 대비로 전북도가 피해입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수 기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전달

최형열 도의원, 법안 발의 한병도 국회의원에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전주·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발의한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을 6명 도의원과 함께 지난달 30일 국회에 방문해 지방의회법을 발의한 한병도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날 국회에 방문한 최형열(전주5), 김성수(고창), 김정기(부안), 윤수봉(완주), 윤정호(무주), 영영선(정읍), 전운태(진안)의원은 지방자치법연구회 소속 의원으로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공동 발의하며 이를 촉구하고자 함께 면담을 요청했다.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활성화되고 실

질적인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위상 정립을 위한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32년에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하고 조직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에 대한 규정은 없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결맞은 법령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형열 의원은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대의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으며 낙후된 전라북도가 더 나은 미래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호소했다. /김경수 기자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승인 중단”... 원안위 항의방문

고창군의회 소속 조규철 의원, 임종훈 의원은 고창군 한빛원전 방문단체 책임위원과 고창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승인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최근 서울을 상경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5년 전 공극 발견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안전이 원안위에 상정되어 고창군민의 동의 없이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며 “재가동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고창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전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고창군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안전 문제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재가동 절차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규탄과 고창군민의 참여 보장 및 한빛원전 발전 설비 불요불필 제거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하고 성명서를 원안위 측에 전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